



보 도 자 료

3월 21일 업무보고 시작(10:00) 이후

배 포 일	3월 20일 / (총 11 매)	담당부서	홍보기획담당관
과 장	이선영	전 화	2023-7030
담 당 자	박정우		2023-70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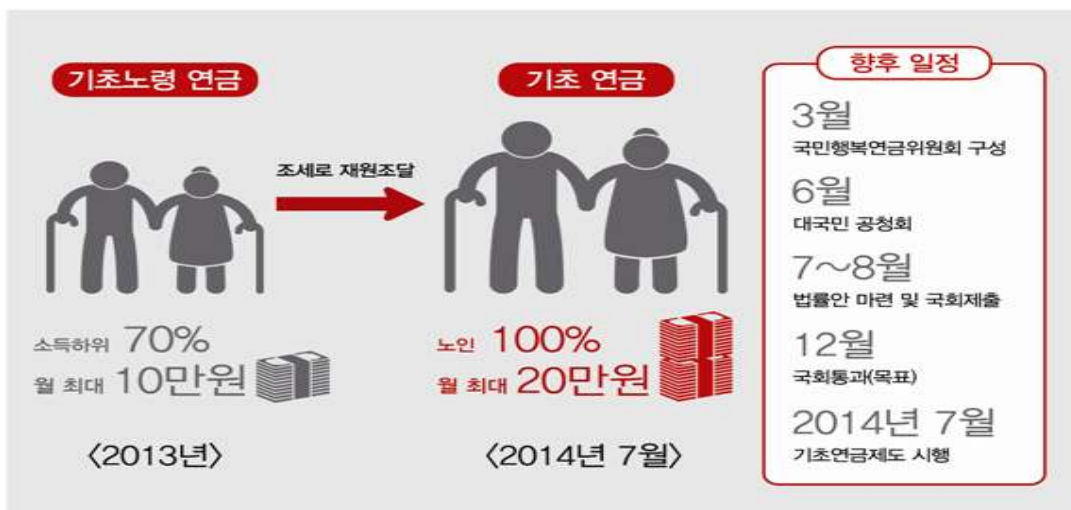
‘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 복지’ 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

- 기초연금, 14.7월 시행 위한 정부안을 금년 8월까지 확정
- 4대 중증질환, 금년 10월부터 필수의료 서비스 보험적용, 3대 비급여는 부담경감책 마련
-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
- 국민에게 찾아가는 국민중심 행정 실현

- 보건복지부(장관 진영, 이하 복지부)는 금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(3.22 승격)와 함께 청와대에서 **2013년도 업무계획**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.
 -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, 일하는 복지,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(복지부 소관 15개)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,
 - 특히 ①기초연금 도입, ②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, ③복지전달체계 개편, ④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, ⑤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, ⑥0~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 하였다.
 - 이와 함께 ‘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 복지’ 실현을 위해,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대기를 해소하여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히고,
 - 특히, 국가 인구전략 수립, 한국형 보육-유아교육 발전 로드맵, 고용·복지 연계강화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한 정부 내·외 협업 계획을 보고했다.

1. 모든 세대가 행복한 기초연금제도 도입

- 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**2014년 7월** 부터 '기초연금제도'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.
- 복지부는 '대통령직인수위원회'(이하 인수위)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하여
 - ※ 인수위 국정과제 -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, 연금액을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, 재원은 조세로 충당
- 금년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,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.



- 진영 장관은 “금년 3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‘국민행복 연금위원회’를 구성*하여, 이 속에서 정책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,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”고 하면서
- “정부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(단장: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, 2개팀 4개반)하여,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,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”고 밝혔다.

* 제1차 회의 개최: 3.20

2.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

- 암, 심장·뇌혈관·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.
 - 금년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,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.
- 또한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,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수행한다고 밝혔다.
 - 복지부는 만약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,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감당하기 어렵게 증가시킬 것을 우려하고,
 - 중증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.
 - 이를 위해 학계, 전문가, 이해관계자,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(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)를 3월 중 설치하여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.
 - 이와 함께,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최소화하고,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.
- 더불어,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(200만원→120만원)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('13.6월확정, '14.1월시행)
 -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(7월),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(75세이상)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수립(6월)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.

※ '14년 75세 이상, '15년 70세, '16년 65세까지 건강보험 적용

3. 복지전달체계 개편

- 진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“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‘칸막이’와 일선의 ‘복지 갈때기’ 해소가 시급하다”고 하면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- 중앙 차원에서는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‘사회보장위원회’를 중심으로
 - 부처간, 중앙-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, 유사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

- 지역에서는 행정중심의 ‘주민센터’를 복지중심의 ‘맞춤형 복지 허브기관’으로 개편하여
 -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민간자원까지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제공(One-stop & Multi-services)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며
 - 이를 위해 금년 6월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을 마련하고, 7월에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.

- 이와 같이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
 - 무엇보다도 발로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, 이를 위한 관계 부처 협조를 요청했다.

<관련 사례>

□ L씨 가정 위기사례

- 아빠 : 55세 실직후 알코올 의존증
- 엄마 : 47세 잦은 가출, 알코올 의존증, 전염성 질환, 백내장
- 아들 : 12세 지적장애 3급
- 딸 : 8세 지적장애 3급

- 전주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다.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알코올 의존 상태이며, 어머니의 습관적 가출, 자녀학대, 이상행동, 전염성 질환 등으로 가족모두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며, 두 자녀 모두 지적장애 3급으로 어머니 행동 모방, 양육 및 교육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.

□ “통합적 사례 관리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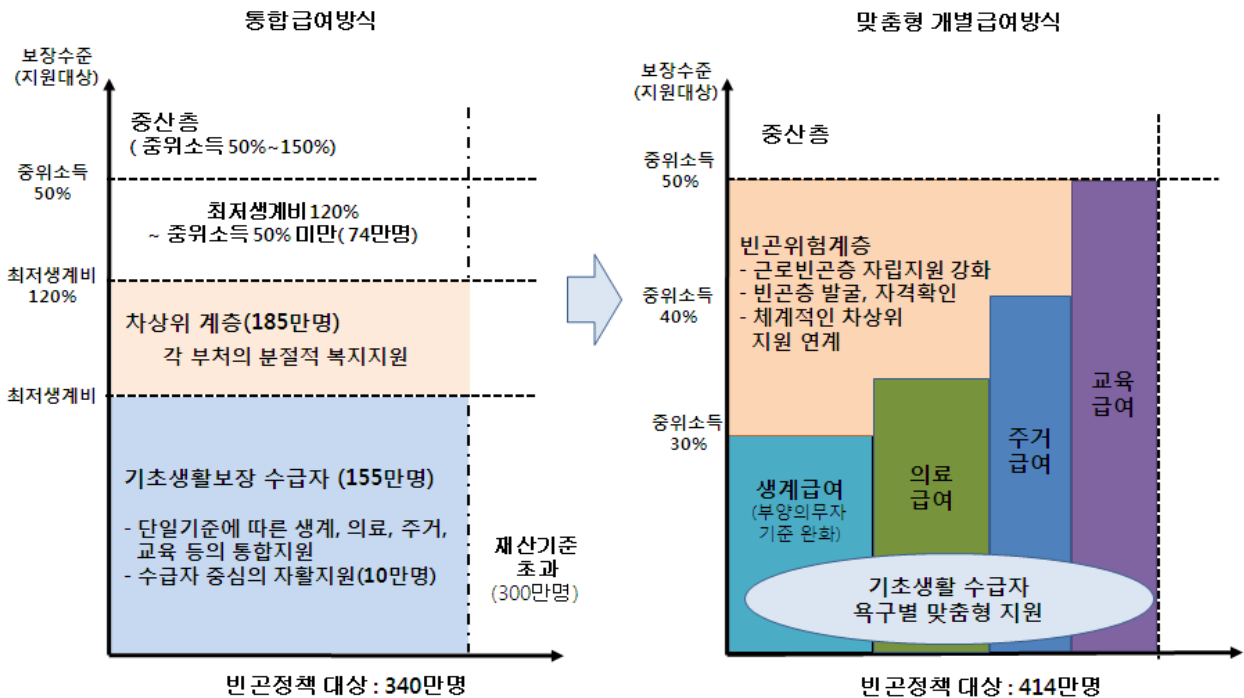
- 사례관리팀은 가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공공-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였다.
 - 우선 사례관리 목표를 가족기능의 회복에 두고 부부의 정신적·신체적 치료 및 자녀 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민-관의 다양한 자원을 총동원하였다.
 - 지역 민간병원 및 국립정신병원을 연계하여 알코올 중독·행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
 -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.
 - 또한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이장, 이웃 주민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,
 - 주 사례관리자의 수시 방문을 통해 부부 알코올 절제 교육을 하고,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실시하였다.
 - 이후 어머니는 여성취업센터와 연계하여 직업 및 자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, 대상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였다.



4.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개편

- 전달체계 개편과 더불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욕구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개편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한다고 보고하였다.
-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급여체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넓고 복지에 안주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
 - 개별 급여별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, 전부 또는 전무(all or nothing)의 급여체계 개선,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포함한 '급여체계 개편방향'을 금년 4월에 확정하고
- 금년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<맞춤형 복지지원 전환 개념도>



* 소득기준을 (현재) '중위소득 수준' → (개선) '중위+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'로 단계적 개선

5.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 전략

- 또한 복지부는 이번 보고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.
- 이를 위해 우선,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, 150개 병원 해외진출,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,
 - IT 융합 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.
 -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, 방과후 돌봄,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-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를 20만개,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.

6. 0~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

- 3월부터 시행 중인 전계층 보육지원과 관련하여서는, 0~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.
-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'우선입소 내실화 대책'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하고,
-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'15년 까지 3~5세의 민간 시설 보육료 부모 추가부담을 없애는 동시에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계층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단가를 현실화('12년 17.7~20만원 → '16년 30만원)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- 또한 국공립·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5년간 2,175개를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고,

- ※ 국공립 675개소 : '13년 75개소, '14~'17년 매년 150개소
공공형 1,500개소 : '13년 700개소, '14~'17년 매년 200개소

-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, 평가인증결과 세분화(3등급 → 5~6등급), 평가인증결과 공개범위 확대('13년 하반기)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-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전국 시군구까지 확충('17년)하고,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 도입(5월) 등을 통해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.

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민중심 행정 구현

- 복지부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,

-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 구현을 위해 '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'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보고하고 몇 가지 과제에 대한 부처간 협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.

- 첫째, 범부처적 협조를 통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- 향후 10여년의 인구보너스 기간은 초고령화의 인구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

-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(14개부처)가 함께 사회 전분야의 아젠다를 발굴하고, 교육, 복지, 고용 등 각 분야의 실천 과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.

- 둘째, ‘한국형 보육-유아교육 발전 로드맵’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, 전문가, 학부모, 시설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‘민관 합동TF’를 금년 상반기 중 구성, 이 속에서 범부처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.
- 셋째, 기초수급자 등의 일반 시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보고하고,
 -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의뢰하여 취업기회를 적극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넷째, 정부간 뿐만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.
 - 기업 등 민간 부분과 함께 나눔문화 및 나눔환경을 조성하고
 - ‘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’와 ‘의약계발전협의체’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직종간 소통과 신뢰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논의의 장을 운영할 계획이다.

미래보는 대한민국 2017년

2012

2017



- 국공립·공공형 어린이집 이용비율 20% ▶ 30%
- 산모신생아 도우미 혜택 수혜 6.4만명 ▶ 17.7만명
- 공공형 산부인과 확대 7개소 ▶ 48개소



- 사회서비스분야 4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(96만개 → 140만개)
- 보건산업분야 2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



- 기초연금수급자수 증대 및 연금액 증가 (391만명/최대 10만원 → 669만명/최대 20만원)
- 노인일자리 증대 22만개 ▶ 43만개
-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34.2만명 ▶ 56만명



- 저소득층 지원대상범위 확대
최저생계비 120% 이하 (340만명) ▶
중위소득 50% 이하 (414만명)
- 자활성공율 22% ▶ 30%
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및 이용시간 증대
(5만명/86시간 → 6.2만명/120시간)



- 고혈압 적정관리율 37% ▶ 50%
- 중증외상환자 적절 처치율 52% ▶ 80%

